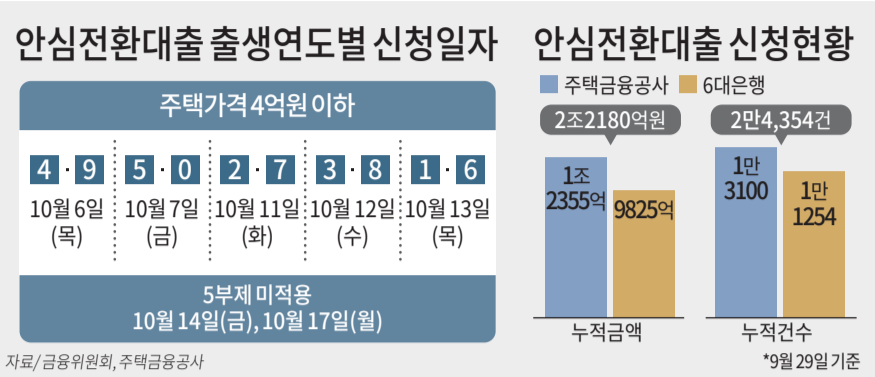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신청금액 2.2조... 공급규모 미달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 완화해 접수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선정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2.2조원으로 공급규모 25조원에 한참 미달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청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4억원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증자리

론·적격대출·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적용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금리는 보증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포인트) 인하한 3.80~4.00%이다. 연 소득 6000만원·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보증

자리론 금리보다 55bp 인하된 3.70~3.9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6일부터 17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인 사람은 6일, 5·0 인 사람은 7일, 2·7 인 사람은 11일, 3·8 인 사람은 12일, 1·6 인 사람은 13일 신청하면 된다.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미적용한다.

KB국민· 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다.

◆17일 이후, 주택가격 요건 완화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

가격 저가순으로 최종지원자가 선정된다.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공급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신청 받지 않고,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며 추가신청을 받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 건수는 2만 4354건으로 누적금액은 2조 2180억원이다. 공급규모에 비해 신청접수 물량이 미달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 접수(10월 6~17일)를 진행한 후 신청규모가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하여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보험사기 매년 증가... 국감서 다시 다룬다

생보사 카드납입률, 11% 불과 “보험설계사 자격요건 검증해야”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사기와 저조한 보험료 카드납입률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의원들이 보험업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보험사기와 저조한 카드납입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허술한 보험설계사 등록 프로세스로 인해 보험사기설계사 등이 검증 없이 보험설계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협회의 중대한 업무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금융당국과 논의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생·손보험회가 국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

르면 지난 10년간 생보협회는 총 117만 9666명, 손보협회는 총 119만 6219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으로 총 80억 8000만원, 손보협회는 총 71억 8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84조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손보협회는 보험설계사 등록심사 시 등록신청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생보사들의 저조한 보험료 카드납입률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가 황운하의원실에 제출한 ‘생보사 카드납입현황’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생명보험 18개사의 전체 납입건수 대비 카드결제 납입건수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메트라이프생명은 0.1%, ABL생명은 0.3%, 삼성생명은 0.7% 수준이다. 반면 AIA생명은 42.5%, 라이나생명은 39%, KB생명은 26.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에 체결된 카드가맹점계약을 해지해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라며 “일부 보험회사는 같은 그룹 소속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수의 카드사를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납입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권준학 농협은행장, 직접 내부통제 점검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실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장이 직접 나섰다.

농협은행은 권준학 행장이 일선 영업점을 방문해 시제금 및 중요용지 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진행한 이번 점검은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문제와 시장변동성 확대 등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올해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함이다.

권 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및 강화를 통해, 고객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권준학 은행장이 지난달 30일 일선 영업점을 방문하여 중요용지 등 내부통제 점검을 직접 실시했다. /NH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올해 초부터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시제금 테마 감사 및 현장점검 활동을 확대 실시했다. 또한 본부서 내부통제 세부 점검 프로세스 마련 등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보험가입 후 직무변경시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Q&A

Q. 최근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부서로 전근하였습니다. 동일 직장 내 인사이동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A.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 지급된 데 따른 분쟁 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의 3가지 사항에 유의하세요.

첫째,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둘째, 보험회사에 직무변경을 알릴 경우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면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를 막을 수 있으며, 직무변경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지거나 기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은 통지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 예상보다 커져”

▶▶ 1면 “킹달러” 속수무책‘서 계속

한은,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 ↑

◆14일 금통위,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오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은의 행보에도 눈길이 모인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릴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에 나선 이후 2번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수개월 동안 말씀드린 0.25%p 인상 포워드 가이드(사전 예고 지침)는 전제 조건 변화가 국내 물가, 성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답변하면서, 사실상 추가 빅스텝을 시사했다는 시장의 반응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연준의 3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됐다. 시장은 역전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역전 폭이 확대되는 속도가 빠르고 역전 폭도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의 고민도 커졌다”라며 “9월 FOMC 이후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동시에 환율 절하가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이 많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연준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0.75%p, 0.50%p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은도 10월과 11월 회의에서 연속적인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했다.

/백지연 기자